

정부·지자체·대기업 손잡고 창조경제 전진기지 구축

박대통령 17개 창조센터 전국순회 마무리

정부 최선 다해 지원... 시너지효과 극대화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 참석 행보가 22일 인천 센터 출범식을 끝으로 10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지난해 1월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박 대통령은 같은 해 9월15일 대구 센터 출범식부터 시작해 이날 인천 센터까지 서울과 세종 센터를 제외한 15곳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 직접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인천센터 출범식에서 “작년 9월부터 시작된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이 모두 마무리됐다”며 “고유한 특색과 장점을 갖춘 전국 혁신센터들이 대한민국 창조경제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온라인 창업·사업 아이디어 플랫폼인 창조경제타운의 오프라인 모델인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의적 지역 인재, 창업·벤처기업, 대학·연구기관, 지자체 등 지역의 창조경제 역량을 연계해 지역 내 창조경제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공간이다.

창조경제 혁신센터의 특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대기업이 손을 잡고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혁신 모델을 만든다는 점이다. 특히 창업·벤처기업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사업 모델 및 상품개발,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는 대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9월2일 주요 대기업과 혁신센터를 연계해 1대 1 전담 지원 체계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직접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후 출범식 때마다 센터별

주요 기능을 강조하고 지역 센터별로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면서 지역 내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광주센터는 자동차 산업 창업과 수소차 연관산업, 전남센터는 농수산업에서 바이오 화학에 이르는 생명산업의 전초기지로 각각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호대는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모두 출범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인천 센터를 포함해 17개 센터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각각 고유한 특성과 장점을 갖춘 전국 혁신센터들이 본격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면서 창조경제 성공 사례를 확산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인사는 “이제 집을 지었으니 앞으로 차분하게 목표한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도 창조경제 혁신센터의 성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관련 행보를 계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제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 고개를 흔들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대기업의 실질적 투자 없이는 전시장 사업에 그칠 수 있을 뿐인 상황에서 상당수 대기업은 정부 눈치를 보면서 이 정권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투자 시늉만 하고 있다”며 “다음 정부 때에도 이 사업이 계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 부정적 전망이 강한 편”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외국인도 “위안부 할머니 힘 내세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집회에서 한 외국 여성이 할머니들께 응원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부패와의 전쟁’ 칼 뽑아 들었다

황총리 사령탑... 비리 유형별 TF 운영

검·경·감사원 등 고강도 협업체제 구축

황교안 국무총리가 진두지휘하는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 작업이 올해 하반기 공직사회의 핵심 과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법무부 장관 출신인 황 총리가 사령탑이 되고, 감사원과 검찰 등 유권기관들이 강도높은 협업체제를 구축해 박근혜 정부 집권 하반기 부패척결 작업에 역량을 모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이다. 무엇보다 황 총리의 전날 국무회의의 발언은 부패척결 드라이브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진다.

황 총리는 박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총리실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

야의 각종 비리에 대해 비리유형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서 단속과 함께 제도 개선을 아우를 수 있는 총체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중요 국책사업에 대해선 총리실을 중심으로 각종 계약과 예산 집행에 대한 상시검증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 총리가 취임사와 기자회견 등의 등을 통해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고 밝힌 적은 여러 번 있었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청와대는 국무회의의 중요후 서면브리핑까지 내서 황 총리의 발언을 소개했다.

여권 관계자는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차원을 넘어 대통령은 개혁 작업에 매진할 테니 부정부패 척결은 총리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마무리해달라는 당부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22일에는 이완수 감사원 사무총장이 정식으로 취임했다.

이 총장은 황 총리와 사법연수원 동기에 다자 황 총리와 마찬가지로 검찰 출신으로, 이명재 대통령 민정특보가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감사원 외부 인사가 감사 업무를 진두지휘하는 사무총장에 오른 것은 16년 만으로, 부정부패 척결을 향한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총장 역시 취임 일성이 ‘부정부패와 무사안일 척결’이었다.

이 총장은 취임사에서 “감사원은 공직

사회의 부정부패와 무사안일을 척결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해야 한다”며 “국가 주요 정책이나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점검하고,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황 총리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할 때 차관을 지내 황 총리와 ‘찰떡궁합’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장관 역시 지난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우리 사회의 고질적 부정부패는 국가 재도약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불법과 편법이 뿌리내릴 수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총리실은 앞으로 각 부처와 공동으로 점검단 등을 구성해 비리 구조를 찾아내고 개선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일시적으로 TF를 구성했다가 해체하는 방식이 아니라 비리가 근절될 때까지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된다

‘태완이법’ 법사위 소위 통과

현재 25년인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를 통과했다.

소위는 형법상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되, 강간치사나 폭행치사, 상해치사, 존속살인 등 살인죄의 경우 해당되는 개별법별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했다.

살인 이외에 ‘5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의 경우 DNA 등 과학적 증거가 확보되면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공소시효를 10년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심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이 법안은 1999년 5월 20일 대구 동구 골목길에서 학살자 공부를 하러 가던 김태

완(사망 당시 6세) 군이 누근가의 황산테러로 49일간 투병하다 숨진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게 될 위기에 처하자 발의됐다.

수사당국은 지난해 이 사건을 재수사했지만 용의자로 지목된 이웃주민 A씨의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으며, 이에 태완군 부모가 공소시효 만료를 사할 앞둔 지난해 7월4일 재정신청을 냈지만 지난 2월 기각된 바 있다.

태완군 부모는 재정신청 기각에 불복,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은 최근 재항고를 기각하며 사건을 종결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 억울한 죽음을 끝까지 밝히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전남도, 서기관 승진·전보 인사

전남도는 22일 과장급(서기관) 승진과 전보인사를 27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명단 22명>

이번 인사에서 승진자는 총 13명으로 신설된 감사담당관실 청렴지원관에는 최형열 행정담당, 식품안전과장에 이순석 공공보건담당, 동부지역본부 동부총무과장에 안기권 경제총괄담당, 각각 승진 발령됐다.

승진 대상자들은 승진 순위를 기본 원칙으로 하되 투자유치와 업무추진 실적, 중앙부처 인사교류 등을 감안해 일부 발

탁했다. 전보는 총 41명으로 과거 근무경력과 업무역량을 기준으로 했다.

관광과장에는 안기호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중소기업과장에 신재춘 규제혁신지원단장, 농업정책과장에 김진하 목포시의회 사무국장, 해양항만과장에 최정희 도입대 사무국장, 창조산업과장에 신연호 환경산업진흥원 사무국장, 각각 전보됐다. 전남도는 5급 이하 후속인사를 오는 31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장필수기자 bungy@

순천만정원 국가정원 지정 위해 道에 지방정원 등록

순천시는 지난 21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국가정원 지정 전 단계인 지방정원 지정을 위한 등록신청서를 전라남도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순천만정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 먼저 지방정원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후 전남도에서 발급한 정원 등록증과 함께 산림청에 국가정원 지정을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승인하게 된다. 국가정원이 되려면 면적 30ha 이상, 5

종 이상의 주재정원, 조직과 전담인력 8명 이상, 녹지율 40%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지방정원이어야 한다. 산림청은 이런 절차를 거쳐 내달 초 순천만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순천시는 오는 9월 4일 서울광장에서 순천만정원 홍보행사를 열고, 같은 달 5일에는 순천만정원과 서울 시청 광장에서 대규모 축하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지자체 내년 업무추진비·복지포인트 동결

지방자치단체의 내년 업무추진비와 지방공무원 ‘복지포인트’가 동결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의회와 공무원 관련 기본경비를 동결하는 내용으로 ‘2016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자체 내년 예산편성기준을 보면 집행기관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 경

비, 기타 기준경비가 올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기타 기준경비는 공무원이 전국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복지포인트와 일·숙직비 등이다. 또 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협의할 해야 하는 법령이 내년 예산편성기준에 반영됐다. /*연합뉴스

상무지구에 삼희불낙이 2개인 이유를 아십니까?

삼희식당, 삼희불낙
“삼희식당, 삼희불낙”은 1971년도에 총장로5가에서 김순례 할머니가 상호와 요리를 최초로 개발하여 사용하였으며, 현재까지 44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김순례 가족들의 가업입니다.

삼희불낙이 상무지구에 2개인 이유
광주 상무지구 삼희불낙이 인근에 나란히 2군데 있어서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데 최초개발자 김순례 할머니가 직접 운영중인 매장은 이마트 옆의 “원조삼희불낙”입니다. 그리고 롯데마트 옆의 삼희불낙은 이혼한 셋째며느리가 운영중입니다.

삼희불낙은 상표분쟁 중
현재 김순례가족과 이혼한 셋째며느리 사이에는 상표소송이 진행중입니다. 김순례 가문에 며느리로 들어와 살면서 김순례할머니가 개발한 요리와 상호의 가치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고 상표를 빼앗으려고 특허청에 “삼희불낙, 삼희식당”이라는 상호와 로고는 자기가 개발한 것이라고 말도 안되는 등록신청을 한 것입니다. 재혼하면서 “삼희불낙” 상호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어 계획적으로 “삼희불낙”이라는 이미 마련된 반석을 도둑질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44년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 원조 개발자인 척 허위광고를 하고 서울,

인천 등에 점포를 개설하여 가맹점을 모집하는 등 소비자를 속이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나이가 40세인 사람이 44년 식당업을 했다고 억지 추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순례할머니의 삼희불낙
김순례할머니는 하루도 쉬지 않고 새벽이면 좋은 재료를 사기 위하여 시장에 다녀오고 손님을 접대하고 있으며, 식당업이 아닌 다른 길을 가지 않았으며, 이윤만을 추구하여 사람을 현혹시켜서 장사를 하지 않고 푸짐한 요리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현재 나이가 78세임에도 가게를 지키면서 생활한다는 것은 장인정신이 없는 안 될 것입니다.

김순례할머니의 삶의 전부와 같은 “삼희불낙”을 이혼한 셋째 며느리가 자기가 개발한 것이고 원조라며 비인간적이고 패륜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할머니가 살아있는 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많은 사랑을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고개숙여 감사드리며 대한민국 맛집들이 많이 겪는 상가 사안에 대해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진실과 도덕이 존재하는 사회가 되기를 기원하며, 전통을 지키는 맛집 삼희불낙의 창업자 김순례 올림

원조 삼희불낙 ☎ 062-372-2232
광주 서구 치평동 1220-2번지 리치니스빌딩 1층